



GDP 3.4% 추가성장 효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성장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과연 어떤 분야의 이익이 크고 어떤 분야의 부담이 우려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1. 종합적 영향

가. 무역자유화의 장·단기적 영향

DDA 협상의 타결은 곧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시장개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효율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증가와 투자증대가 자본 스톡의 증가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필수적인 국제경쟁력은 정책적 육성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 타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의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의 심화는 비

효율적인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의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경쟁제고 효과는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며 저축률이 일정하다면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저축됨으로써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한다. 자본스톡의 증가는 다시 국내총생산과 소득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본 자본축적 효과이다.

DDA 협상 타결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도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해 이와 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환경의 개선, 자본축적 효과 등을 통해 GDP의 증가를 가져오고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는 특히 무역의존도가 70%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그 동안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체질의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경제의 개방도가 높아진 한편으로 기업의 경쟁력 또한

향상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DDA 협상 타결에 따르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우리에게 주는 개방의 부담보다는 세계시장 개방으로 누리는 우리의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DDA 협상 의제 중 특히 공산품 관세 인하, 다수의 서비스 시장개방, 반덤핑 등 규범의 강화 그리고 투자 등 새로운 통상이슈의 규범화에서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분야라고 할 지라도 이로 인한 도전이 경제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많다.

농업, 일부 서비스 분야 및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번 DDA 협상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가 미주, 구주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의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다자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경우 지역협력 불참에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오늘날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 중 절반 이상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중국, 일본 마

지 입장을 바꿈으로써 범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DDA 협상의 타결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 사이의 조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협상에서 GATT 24조의 강화 등을 통해 양자간의 제도적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상 타결 자체가 다자체제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협정을 개방적이고도 다자체제에 보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역협정의 첫발을 내디딘 한국의 입상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무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나. 추정 효과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몇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협상 타결 시한을 2년 정도 남겨두고 아직은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 영향을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즉, 보다 상세한 분석은 협상 타결로 인한 한국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추가적 시장개방 폭과 향후 국내산업의 대응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만 그 대체적인 방향을 추정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각국의 관세율이 농업, 제조업, 서비스의 전 부문에 걸쳐 30% 이하될 것으로 가정한 한 연구에 의하면 DDA 타결로 인해 한국의 GDP는 생산성 향상 여부에 따라 1.2~3.4%의 추가 성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중국, ASEAN과 함께 DDA 최대의 수혜국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석대상이 된 7개 국가 혹은 지역들이 모두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DDA 협상이 포지티브셈 게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GDP 이외에도 수출이 5.5%~6.4%, 수입은 6.7%~6.8% 증가하며 교역조건도 상당한 정도 개선될 것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각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반면 농산물, 기계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자동차 산업은 수출 측면에서도 DDA 협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산업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자산업의 경우 시장개방의 직접적 효과는 부정적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 생산성 제고효과를 감안할 때는 (+)의 성장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는 DDA 협상으로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수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수지는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계

분야와 농산물의 무역수지 적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협상 추이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르는 생산성 제고 효과는 효율적 대책과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향후의 우리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2. 분야별 영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DA 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성장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도 없지 않다. 제조업과 서비스 및 규범 분야는 이익이 클 것이지만 농업은 가장 부담이 우려되는 분야이다.

가. 긍정적 측면

제조업 분야의 무역자유화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크고 가시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한 국가별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은 중국, ASEAN과 함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관세인하 폭과 함께 인하 방식에 크게 좌

우되겠으나 교역대상국 중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당한 정도로 자유화가 진전되어 이미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관세율과 그 양허의 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대개도국 수출 확대에 상대적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개방을 가속화해 왔기 때문에 일부 금융서비스 분야와 교육,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상 결과 서비스 무역장벽이 감소할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개방정도가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에 따라 제조업 파급효과가 큰 것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제조업 부분의 생산, 고용, 투자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반덤핑 협정 협상은 기본적으로 협정의 기본개념과 원칙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규정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반덤핑 조치의 자의적 발동과 남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1년간 해외시장에서 총 33건의 반덤핑 규제와 20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중국, EU를 이어 세계 세 번째 반덤핑 대상국이 되어왔다.

또한 작년 말 현재 외국이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총 140여건의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 관련 수입규제가 전체 건수의 약 83%인 10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EU에 의해 우리 주력 수출기업이 받는 반덤핑 규제가 많다는 점에서 규정의 개선에 따르는 수출환경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DDA협상 타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의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의 심화는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부담보다는 득이 큰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선진 외국업체의 국내지사 혹은 자회사 설립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진 기술 및 경영방법의 획득과 생산성 향상 등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DDA로 인한 서비스 자유화 효과

분야 중의 하나가 투자, 경쟁정책 등의 새로운 통상 이슈 분야이다. DDA 협상에서 다자간 투자규범이 제정되는 경우 협정의 수준과 참여국의 범위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투자협정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들인 개도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이들의 협정 참여 범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다자간 경쟁규범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 경쟁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이것은 개도국들의 경쟁법 도입 및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접근과 활동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완화,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선진국과 경쟁정책을 둘러싼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다자적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부 분야로서는 중간재에 대한 경성카르텔 규제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나. 부정적 측면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는 농산물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개방 속도의 가속화 등 농업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협상의 3대 협상목표 중 수출보조금

은 한국의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및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에 따른 국내농업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도하 각료 회의에서 합의된 농산물 협상에서는 이러한 3대 목표가 협상결과를 예단치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등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내 농업이 받는 충격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DA 농업 협상에서는 UR 협상 당시보다는 큰 폭의 관세와 보조금 추가 감축이 이루어지고 그 감축의 속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세 분야에서는 농산물 중에서도 고추, 마늘, 과일 등 고관세 품목이 관세인하에 의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또한 관세화를 유예해온 쌀 등 주곡생산의 피해가 예상된다.

제5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협상을 위한 양허안 제출을 하기로 되어있는 합의에 따라 DDA 농업협상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특히 2004년에 종료되기로 되어있는 UR 협정상의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쌀 관세화유예의 연장보다 관세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쌀 자급률, 농가의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조금과 관련, 허용대상보조(Green Box)의 기준이 강화될 경우 국내 보조총액에서 허용대상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한국농업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다. 특히 생산시설과 농기계 보급, 규모확대 등 투자 지원에 의한 구조조정 사업이 허용대상보조에서 제외된다면 향후 농업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규범 분야 협상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산보조금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한 규범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의 수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면세유 등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어업 분야에 타격이 예상된다. ●